

경제 위기

금강산 비극

일본 군국주의 묵인·방조

이명박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명박은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촛불이] 더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G8 회담에서 조지 부시도 이명박의 등을 토닥이며 “인생이라는 게 시련과 도전의 연속[이며] ... 어려움을 겪은 게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고 위로했다.

물론 이명박은 이런 헛된 기대에만 매달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촛불 끄기에 나섰다. 공안 탄압·촛불 원천 봉쇄가 잇따랐다. 촛불의 진실을 대변한 MBC <PD수첩>에 대한 탄압과 조중동 반대 네티즌에 대한 가택·직장 압수수색까지 벌어졌다. 떡값검

찰이 촛불 짓밟기에 앞장서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시식·홍보 행사도 이어졌다.

만약 촛불이 이명박과 조중동의 주장처럼 “전문 반미시위꾼”들이 퍼뜨린 “괴담”에 의한 “정보전염병”이라면 이렇게 끝 수도 있을 것이다. 경찰과 한나라당은 최근에도 “한국진보연대 등이 치밀하게 촛불시위를 기획하며 선량한 시민들을 선동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 인터넷에서 번져간 정부·정책 비판 글들은 대중적 촛불 저항의 방아쇠 구실을 했을

뿐이다. 촛불의 주된 원인은 경제 위기 속에서 커져가는 서민의 고통과, 우파 정부와 미친 정책들에 대한 분노다. 그리고 이것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촛불은 공안 탄압 속에 한동안 작아졌어도 꺼지진 않았다. 오히려 두 달이 지나면서 촛불은 이미 더 광범한 정책들과 정부 자체에 대한 반대로 변모·발전해 왔다. 더욱 급진화·정치화하고 있는 것이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 내에서도 이명박 퇴진을 의제에서 제외하려 하거나 쇠고기 재협상 요구만으로 의제를 협소화하려는 온건

파들의 시도는 쉽게 관철되지 않고 있다.

» 3면으로 이어짐



독도와 MB 외교 파탄

4면

금강산 비극과 MB 외교 파탄

5면

위기의 서민 경제와 대안

6~7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금융 위기

3면



크리스 하먼 · 알렉스 캘리니코스
특별 인터뷰

- 세계경제와 제국주의의 앞날

8~9면

조지 부시 방한에
반대하는 이유

12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할 것인가

9면

미친 교육에 맞서는 서울시 교육감
주경복 후보 인터뷰

2면

<저항의 촛불> 웹사이트를
http://www.
resistcandle.com
방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정기 호는 여름 휴가철을 고려해
8월 18일에 발행합니다.
그 사이에 필요시 호외가 발행됩니다.

맞불 신문 제호를 변경합니다

‘다함께’는 지난 2006년 6월 13일부터 주간 신문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지피는 <맞불>’을 발행해 왔고, 95호에 이르기까지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번 촛불 행진에서도 <맞불>은 정기 호가 5만여 부 팔리고, 호외가 55만여 부 배포됐습니다.

이런 <맞불>의 성과를 이어가면서도 촛불 행진 참가자들과 일체감을 높이고, 촛불 행

진 목소리를 울리게 대변한다는 취지를 더 살리기 위해 <저항의 촛불>로 제호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다함께”의 기본 입장”란은 “대중 행동을 위한 요구들”로 조만간 대체할 예정입니다.

<맞불>을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이 <저항의 촛불>에도 계속 지지와 관심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인용해도 될까요?

“당신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주차 안내 봉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 감동했다.”

— 이명박에게 감동했다는 부시

“촛불질과 총질은 다 같이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향한 것이다. 이 기회에 우리가 내적(內敵)을 치면 주적(主敵)도 무너진다.”

— 촛불이 ‘내부의 적’이라는 극우익 조갑제

“글로벌 리더로 한국에서 이견하면 한 이름을 어디서 찾을 수 있으랴. 지금쯤 그는 대혼돈의 바다 위를 비춰 줄 섬전 같은 지혜와 통찰을 가슴 한편에 묻어 둔 지도 모른다.”

— 비리 왕초 이견희를 찬양하는 〈머니투데이〉

“이재용 씨는 60억 원을 받아서 1조 원으로 불렀는데 이런 날도독 행각을 순전히 ‘행운’이라고 보는 것은 법원이 특권층에 너무 관대한 것”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김인국 신부

“후쿠다 총리가 지난 9일 G8 확대정상회의 도중 …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표기하겠다고 통고했으며 이 대통령은 ‘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 〈요미우리신문〉, 괴담인가 진실인가?

“내가 활동하는 카페에서 한 회원이 ‘우리 집에 쥐가 한 마리 있는데 어떻게 처치할까요’라는 농담을 올렸고 회원들은 ‘아쿠자도 있고 유럽용병도 있다’는 식으로 농담 댓글을 달았다. 〈조선일보〉가 이를 보고 대통령 암살 카페가 있다고 보도했다.”

— 한 주부

“이명박 물러가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 7월 10일 경찰 봉쇄로 무산된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장소 옆 초등학교에서 창가로 모여든 아이들의 함성

주경복 서울시 교육감 후보 인터뷰

“‘미친 교육’을 막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오는 7월 30일에 처음으로 서울시 교육감을 시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이번에 당선하는 교육감은 서울의 교육 정책에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 주경복 후보가 유일한 진보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주경복 후보는 건국대 교수로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민교협)’ 상임대표를 지냈다. 민교협, 전교조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명박 교육 정책에 맞서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주경복 후보를 인터뷰했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갖는 의미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권의 교육 정책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취임 초부터 ‘어쩔지’, 영어몰입교육 등을 얘기하며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4·15 규제 철폐 조치’로 말미암아 0교시·우열반, 존지, 리베이트 등이 부활할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명박의 ‘미친 교육’ 정책에 반대해 촛불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촛불로 모인 상식의 힘이 이명박의 미친 교육 정책을 저지할 것입니다.

이명박 교육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박은 학교를 전쟁터로 만들고 학생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려 합니다. 영어몰입교육, 자사고·특목고 증설 프로젝트 등은 모두 사교육을 살찌워 주는 정책입니다. 방과후 학교를 영리 단체와 연계하겠다는 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숙형 공립학교·마이스터고 등을 늘리겠다는 교육 다양화 프로젝트 역시 속을 들여다 보면 부자들만을 위한 귀족학교 만들기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육 정책에 학생은 없고 학력과 경쟁만 있을 뿐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공정택 현 서울시 교육감에 맞선 주경복 후보님의 핵심 주장은 무엇인가요?

공정택 현 교육감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을 대부분 따르고 있습니다. ‘리를 이명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의 배를 불리고 교육을 시장 원리에 내맡기



광우병 위험 쇠고기 급식에 반대하는 주경복 후보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0교시·우열반을 폐지하고 외고의 기능을 정상화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미친 교육 정책을 막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할 것입니다. 낙후지역에 대한 교육 예산 지원을 늘리고,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초중고 무상교육을 확대할 것입니다.

공공성을 등한시하다 보니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3년간 공공기관 청렴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윤만을 중시하는 이명박·공정택의 교육 정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교육현장의 부패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서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서 촛불을 밝힌 청소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희망을 보여 주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미친교육’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당선한다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생회 대표자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갖는 등, 인권을 중시하고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다른 교육은 가능합니다.

인터뷰·정리 김영익

레바논 한국군 파병 연장 철회하라

조명훈

7월 16일 국회는 UN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연장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현재 UN 평화

유지군의 일원으로 레바논에 파병돼 있는 한국군은 내년 7월까지 1년 더 주둔하게 됐다. 18대 국회를 열자마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제국주의 침

략 지원이었던 것이다.

레바논 파병 한국군의 주요 목적은 미국과 이스라엘 편에서 “해즈볼라를 무장해제하고 레바논 정부를 지원”(이스라엘 외무장관)하면서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가

운데 한국군 파병을 연장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도 중동 지역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전쟁과 점령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2004년 이라크 김신일 씨의 죽음, 2007년 아프가니스탄 윤장호 하사, 심성민·배형규 씨의 죽음과 같은 참극이 레바논에서 반복될 수 있다.

촛불에 보안법 찬물을 끼얹으려는 이명박 정부

최미진

촛불을 짓밟는 데 혈안인 이명박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의 시동을 다시 걸고 있다.

이미 이명박이 당선하자마자 “좌파 적출 수술”(한나라당 의원 심재철)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이 떠돌았고, 그후 두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 꼴로 국가보안법 사건이 터졌다. 조국통일법민족청년학생연합(법청학련) 남측본부의 장 윤기진 씨도 이때 구속됐다. 공안당국은 경찰 탄압으로 촛

불 운동을 억누르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남북 간에 냉랭한 기류가 형성된 틈을 타 신속하게 다시 윤기진 씨 사건을 꺼내 들며 속죄양 찾기에 나섰다.

윤기진 씨는 1999년에 한총련 의장이 되고부터 구속 때까지 무려 10년 동안 수배 생활을 해야 했다. 이번에 공안당국은 수배 생활 동안 윤기진 씨가 지낸 곳을 마련해 주고, 학생증을 빌려 준 사람들까지 국가보안법의 ‘편의 제공’ 혐의로 불구속 입

건했다. 수배자가 안쓰러워 호의를 베푼 선량한 시민들의 ‘죄’까지 묻겠다는 것이다.

속죄양

국제엠네스티의 강력한 폐지 권고도 무시한 채 ‘민주공화국’에서 사상과 신념을 법으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데, 이것도 모자라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준 행위까지 반민주적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완전히 반인륜적이다. 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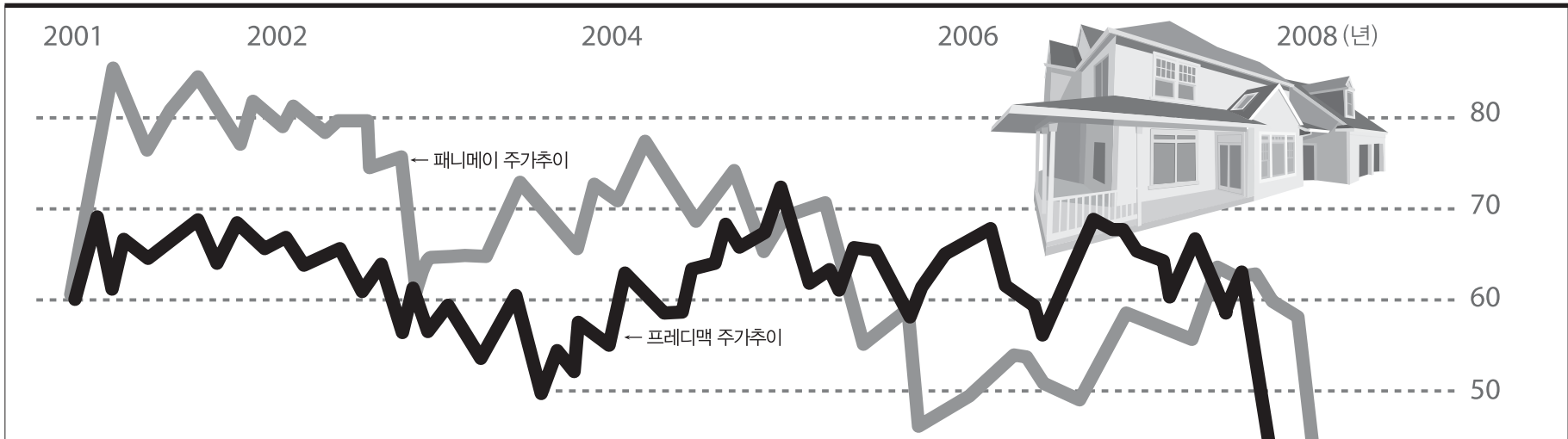
다가 어떤 행위까지가 ‘편의 제공’인지 판단하기도 어렵다. 이때문에 국가보안법상 ‘편의 제공’은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는 독소 조항이다.

최근에는 자신의 블로그에 《제국주의론》, 《임노동과 자본》 인용문을 올리고 대학 교재로도 쓰이는 정식 출판물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한 하사를 군기무사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혐의로 처벌하려 했다. 군 검찰은 너무 무리한 적용

이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기무사는 이 사병이 블로그에 이명박 탄핵 서명 링크를 올리자마자 국가보안법 조사를 시작했다.

7월 9일에는 기무사가 현직 장교의 대학시절 전력을 문제 삼아 매일 불러 조사하고 집까지 압수수색했다. 기무사는 대중적으로 널리 읽히는 《태백산맥》, 《감옥으로부터의 사색》까지 증거물로 압수해 갔다.

이명박의 반민주·반서민 정책을 저지하려고 촛불을 들어온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 시도에도 함께 반대해야 한다.



더욱더 심각해지는 세계경제 위기

“금융 위기 최악의 국면은 이미 끝났거나 곧 끝날 것이다.” 지난 5월에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미국의 중앙은행]의장 앨런 그린스펀이 한 말이다.

일부 좌파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예컨대 최근 캐나다 맑스주의자 샘 진딘과 리오 패니치는 미국 국가가 경제 불황의 원인들을 중화시킬 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시에, 진딘과 패니치는 “금융화(신자유주의 시대 금융 시장의 힘이 확대된 것을 가리킴)가 세계 자본주의의 생산과 재생산에서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금융 위기는 경제 체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분명 “최악의 국면은 끝났다”는 지적은 현실과 맞지 않다. 그린스펀은 은행 간 대출 금리가 하락할 거라 예상했지만 여전히 매우 높다.

이것은 은행들이 서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외의 안락함을 상징하는 듯하던 브래드포드 앤 빙리[영국 최대 부동산 대출 업체]의 주가는 지난해 8월 이후 계속 추락했고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날린 자본금을 보충하기 위해 금융서비스국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미국 재무부 장관 헨크 폴슨은 더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난 일요일[7월 13일] 폴슨은 최근 주가가 폭락한 두 개의 국책 모기지 회사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구제 계획을 발표했다. 폴슨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저리(低利)로 신용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이들을 정부가 인수할 권한을 달라고 의회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파산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처한 곤경에 비하면 영국의 노던록[파산 위기로 최근 국유화된 영국 모기지 은행] 위기는 간식 거리에 불과해 보인다. 노던록은 약 1천 8백억 달러의 모기지를 보유했다. 그러나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보유한 모기지과 빚보증은 5조 3천억 달러에 이른다. 이것은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인 4조 5천억 달러를 능가하는 액수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아니었다면 캘리포니아 은행 인디맥의 파산 소식도 큰 주목을 받았을 것이다. 은행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파산이기 때문이다.

망연자실한 헨크 폴슨(미 재무부 장관, 좌)과 벤 버냉키(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미국·영국·다른 유럽 나라들에서 주택 시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들은 영국에서 주택 경기 불황이 시작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변하면서 1990년대 초의 심각한 부채 위기와 현 상황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실물’ 경제에서 주택 시장과 특히 밀접한 연관을 가진 건설업에 악영향을 미쳐 많은 건설 계획이 속속 중단되고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막스 앤스펜서 같은 대형 소매점들도 고통을 느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확산되는 것이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다. 최근까지 유로존[유로화 통용 지역]에서, 특히 독일에 서, 앵글로 색슨발 위기를 피할 수 있을 거라는 낙관적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5월 유로존 전체에서 산업 생산이 크게 줄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분위기 변화는 독일에서 가장 갑작스러웠다. 독일 경제는 올해 초 매우 빨리 성장했지만, 6월까지 3개월 동안에는 오히려 수축한 듯하다.”

어떤 나라에서는 변화가 더 급격하게 나타났다. 남아일랜드는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7퍼센트씩 성장하면서 유로화 통용 지역에서 기적으로 불렀다. 그러나

2008년 일사(1/4)분기에 남아일랜드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5퍼센트를 기록했다. 심지어 중국의 6월 무역 흑자 규모도 1년 전에 비해 20퍼센트 적었다.

물론 1930년대 대공황에 비견할 만한 불황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한 구제 조치가 보여 주듯이, 국가들은 경제에 돈을 쏟아붓고 파산 기업들을 구제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도 항상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 국면에서 금리를 너무 낮추면 물가 폭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온갖 우울한 경제 소식에도 영국은행은 지난주 금리를 동결했다.

현 경제 위기는 시장의 한계뿐 아니라 국가의 한계도 보여 주고 있는 듯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국내 번역된 주요 저서로는 <칼 말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과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책갈피) 등이 있다.

>> 1면에서 이어짐

반면, 이명박 퇴진을 전략적 목표로 삼고 고물가 규제·비정규직 반대 등으로 의제를 더 확대하자는 강경파의 주장은 작지 않은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더구나 최근 금강산 피살 사건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보여 주듯이 이명박 정부는 곳곳에서 지뢰를 밟고 있다. 이명박과 조중동은 ‘독도 괴담과 독도 촛불’로 변질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다.

자연히 우파는 금강산 사건을 이용해 촛불에 찬물을 끼얹으려 할 것이다. 물론 ‘다 함께’는 국민의 생명을 내뿜개치고 군화발로 짓밟는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듯이, 무고한 비무장 관광객을 살해한 북한 당국에도 반대한다. 한반도에서 냉전 체제 유지에 공모해 온 두 국가 중 어느 쪽도 민주주의와 아무 관계가 없다.(5면의 관련 기사 참조)

특히 이명박 정부는 지지율이 통치 불가능 수준인 20퍼센트대로 고정됐을 정도로 국민 대중의 불신을 받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의 대통령 불신임 투표를 정부가 한사

코 저지한 것도 가결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명박은 이제 더는 ‘불도저’가 아니다. <조선일보> 사회부장 최보식도 “촛불이 쏟아져 나오자, 이 불도저는 스톱했다… 당초 우리가 그를 [불도저라고] 잘못 봤는지 모른다”라고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도 “쇠고기 촛불이 꺼지더라도 공기업 개혁을 시작하면 촛불이 또

등장할 것이고 정부의 역점적인 과제들과 시책들에 대한 반대 촛불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우리는 8월 초, 평화와 민주주의 파괴의 세계적 우두머리인 조지 부시의 방한 반대를 위해 촛불을 더 높이 치켜들어야 하고, 이후에도 촛불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촛불

이명박은 국회 개원 연설에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인터넷의 발달로 대의정치가 도전받고 있다”며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숭고한 기관”이라고 했다.

촛불 운동 내에서도 온건파들은 ‘제도권 수렴’을 말해 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과반수인 강부자 국회가 대다수 서민의 이익과 목소리를 대의한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귀영 연구실장도 “대의제 정치에 대한 기대가 약할 때 국민

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거리의 정치”라고 했다.

이 때문에 한 달 반 만에 가까스로 문을 연 18대 국회의 앞날은 여전히 어둡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한나라당 내 친박 세력들 간에 계속될 아귀다툼도 18대 국회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18대 국회는 대체로 이명박의 미친 정책들을 뒷받침하는 거수기 노릇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모든 법안이 8개월 안에는 직권상정 등을 통해 자동으로 본회

그래서 경제 위기의 고통과 미친 정책에 대한 분노가 더 크게 폭발할 다음 기회를 대비해야 한다. <조선일보>도 “송례문 화재 때 당국은 불길에 잡혔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안에 남아 있던 불이 송례문을 무너뜨리고 말았다. … 아직 국민의 마음속에 불씨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 때까지 촛불의 불씨를 지켜 나가자.

의를 통과하는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다수당인 한나라당만 지지하면 온갖 개악 법안들이 자동 통과된다는 얘기가.

민주당은 신자유주의적 개악 자체에 반대하지 않고 그 속도와 방법에만 반대할 뿐이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과의 사소한 다툼도 거추장스러워하는 것이다.

따라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박원석 상황실장의 지적처럼 앞으로도 “국가와 시민사회가 길거리에서 정면충돌하는 양상이 구조적으로 일상화”될 것이다. 진정으로 서민의 이익과 목소리를 대의·대변하는 정치적 대안은 거리의 촛불 속에서 발전할 것이다.

전지윤

제국주의적 야욕을 드러내는 일본

정진희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 교과서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기했다. 2012년부터 활용될 예정인 이 해설서에는 독도 문제를 일본이 러시아에 반환을 요구하는 북방 네 개 섬과 같은 차원으로 끌어올려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국내외에 널리 선전하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고등학교 공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도 독도 영유권을 명기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독도 영토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본 우파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일본의 조선 침략 과정에서 1905년 일본 영토로 강제 편입됐던 독도는 해방과 함께 한국으로 귀속됐다. 그러나 일본은 1952년 1월에 독도 문제를 제기한 이래 걸핏하면 영유권 주장을 내세웠다.

독도 영유권 주장은 1990년대 들어 본격화됐다. 일본 자민당의 주요 정치인들은 1996년에 독도 영유권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고, 문부성은 1996년 2월 검정 중고교 지리 교과서 5종류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했다.

2001년에는 시마네현 지사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2004년 3월에는 일본 외무성이 웹사이트를 개편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적시했다. 2005년에는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군국주의

이렇게 1990년대 중엽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봇물 터지듯 나온 것은 일본 군국주의 흐름의 일환이다. 1990년대 내내 지속한 경제 위기는 공식 정치의 우경화를 낳았고, 1991년 겔프전 참여를 계기로 일본 지배자들은 군사력 증강을 꾸준히 시도했다.

일본의 군국화 추세는 21세기 들어 더욱 강화했는데, 2001년 9·11 이후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적극 참가하면서 날개를 달았다. 미일동맹의 강화로 일본은 평화헌법이라는 제약 속에서도 군사력 증강의 야욕을 키울 수 있었다.

지난해 일본의 군사예산은 4백억 달러로 세계 5대 국방비 책정국에 들어갔다. 일본군은 비록 주변국들보다 규모는 작지만 최첨단 장비로 무장했다. 전쟁 금지를 선언한 평화헌법도 지난해 국민투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일본의 군국주의화는 곳곳에서 영토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한미일 공조체제를 고려할 때 당장 일본이 독도를 침공할 듯이 말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얘기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 영토분쟁화는 한국과 마찰을 빚을 것이고, 일본 정부는 이것을 군사대국화를 위한 국내 여론 조성에 이용하려 한다.

일본 왕에게 굽실대는 이명박 – 이명박이 독도 파문을 방조했다는 것은 ‘과담’이 아니라 진실이다

좌충우돌 이명박의 ‘일본 프렌들리’ 외교

독도 파문으로 이명박의 ‘대일 프렌들리’ 외교가 난관에 봉착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미래지향적 외교 관계’ 운운하던 이명박 정부는 뒤통수를 얻어맞고선 부랴부랴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주일대사 권철현을 일시 귀국시켰다.

그러나 이런 ‘강경책’이 얼마나 오래 갈지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내심 독도 파문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해 일본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까 봐 걱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4월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로 꼽은 일본부품소재기업공단 조성 사업이 독도 파문으로 차질을 빚지나 않을까 우려한다. 일본 기업의 투자를 더 많이 끌어들이고 앞으로 일본과 FTA도 추진하려는 이명박 정부에게 한일 관계 악화는 원치 않는 악재다.

무엇보다, 한미일 공조체제를 통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이명박 정부가 대일 강경책을 일관되게 고수할 수는 없다. 이명박은 2003년 중단된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그룹(TCOG)과 비슷한 상설회의를 재개하려 한다. 또한 일본이 참가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MD 체제에 한국도 참가하려 한다. 한국은 6자 회담에서 북한 핵 압박에 일본과 공조를 취하고 있고, 미국의 대테러 전쟁 지원에서도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강경 대응’에는 자신들이 일본의 독도 도발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속셈이 다분하다. ‘독도 괴담’이 부활해 ‘독도 촛불’로 이어질까 두려운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 과거사 망언, 신사 참배 등 제국주의 부활의 야욕을 숨김없이 드러내 왔지만 이명박은 이에 아랑곳않고 일본 왕을 ‘천황’

이라 부르고 과거사를 묻지 않겠다며 일본 지배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안달했다.

이명박은 “일본에 만날[언제나] 사과 하라고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주일대사 권철현은 역사교과서·독도 문제를 “가슴에 묻어 두고” 주일대사관 웹사이트에서 삭제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가 독도를 포기했다는 ‘독도 괴담’이 나돌 법했다.

‘독도 괴담’

1960년대 한일협정 추진 과정에서 당시 한국측 대표 김종필이 대일협력 관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독도를 폭파하자고 일본 측에 제의한 바 있고, 박정

희도 한일협정을 위해 미국에 독도 폭파를 제의한 사실이 있으나만큼 ‘독도 괴담’이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셈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대일 외교를 “등신 외교”라며 맹비난을 퍼붓지만 노무현 정부의 대일외교 역시 이명박 정부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 미래 협력을 위해 과거사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노무현 정부 때의 방침이기도 했다. 노무현은 심지어 일본 평화헌법 파괴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다 일본 정치인의 망언이나 신사 참배 등이 부각되면 한국인들의 반감을 고려해 ‘강경책’을 쏟아냈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곤 했다. 이런 일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일본 군국주의에 올바르게 맞서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앞은 항의하는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 단체뿐 아니라 진보 단체들도 일본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

일본 식민 지배를 겪은 한국인들이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 독도가 한국 땅임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진보진영은 단순한 민족주의적 대응을 넘어서야 한다.

지배자들은 경제 위기의 대가를 평범한 대중에게 떠넘기기 위해 민족주의 선동을 이용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자들이 온갖 독도 이벤트를 벌이는 것

을 보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경쟁적으로 독도를 방문하고 이회창이 독도 분쟁시 참전하겠다고 말하는 등 반일 감정을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 강화에 이용하려 한다.

한국의 진보진영은 일본 군국주의에 진정으로 맞서 온 세력과 연대해야 한다. 역사교과서 왜곡·평화헌법 개정·사위대의 해외 파병 등에 맞서 온 일본의 시민·사회운동, 세계 반전 운동과 연대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에 날개를 달아 주는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반대해 한국에서 지속적인 반전 평화운동을 구축해야 한다.

비극의 책임은 남북 당국 모두에 있다

한규한

여성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 초병에게 사살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 당국은 남측 관광객이 군사경계구역에 진입한 것을 탓한다.

그러나 만약 그 지역이 비무장 민간인을 조준 사살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군사 지역이었다면, 제대로 된 경계 펜스조차 마련하지 않은 북한군이야말로 직무유기를 저지른 것이다.

사실, 북한군이 그 지역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이유는 남북 민간인들 간의 자유로운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말이 ‘교류’지 금강산·개성 관광 코스는 고립된 섬이나 다름없다.

북한 관료에게는 평범한 남한 국민조차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잠재적 적대 세력으로 보이거나 보다. 비무장 민간인을 가차없이 사살하는 북한군의 태도에서 북한 체제가 사회주의이기는커녕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는 억압 체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굶주림을 못 견뎌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려는 자국 인민들을 향해 실탄 사격하는 북한 체제의 끔찍한 일상이 이번에 대상은 다르지만 금강산에서 흘끗 폭로된 것이기도 하다.

물론 현대 아산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대 아산은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고 안전시설도 갖추지 않았다. 돈벌이에 눈이 먼 나머지, 피격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관광객들을 금강산으로 보냈다.

피격 사건의 배경

일부 언론은 이번 사건을 “의도된 도발”로 몰기도 한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의도한 도발이건 우발적 사건이건간에 이번 피격 사건의 배경에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이 낳은 남북 관계 경색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피격 사건 발생 후 북한이 취하는 자세에서도 나타난다.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은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일종의 군사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남북 교류사업의 운명은 이번 피격 사건 전에 위태로워지고 있었다. 지난 3월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확대 합의를 사

실상 파기하는 발언을 했고, 이명박 정부는 각종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 6월 22일 북한은 남북 군사회담 담화에서 “3통(남북경협 확대를 위해 10·4 선언 때 합의된 ▲통행시간 확대 ▲통신시설 확충 ▲통관 시 선별검사로 전

환 조치) 합의 이행이 중단되는 현실 앞에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따라 세워야 하겠는가” 하며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사업의 중단 가능성을 암시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총격 사건 발생 하루 전 미국은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 계획을 통보했다.

우왕좌왕하는 이명박 대북 정책

사태가 터지자 한나라당 대표 박희태는 “정부와 북한 사이에 핫라인이라든지 대화가 되는 통로가 정말 없냐”고 당황했지만, 이명박의 대북 정책은 모든 대화채널이 끊긴 10년 전으로 남북 관계의 시간을 되돌려놓았다.

이명박은 이에 대처할 뚜렷한 대책도 없다. 대통령 취임 직후 이명박은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대북 지원과 협상은 없다”고 기고만장했지만, 이번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금강산 피살 사건을 알고서도 남북 대화를 열자고 요청하는 처지가 됐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는 “이번 사건은 남북 화해가 왜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며 대북 화해의 전도사처럼 굴기도 했다.

그런데 이것이 ‘MB 독트린’의 근본적 수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북한이 이명박의 제안을 “가소로운 잔꾀”로 일축했듯이, 이명박은 6·15 선언, 특히 10·4 선언의 이행을 약속하지도 않았고, ‘선핵폐기론’에 대한 미련도 버리지 못했다.

이는 이명박의 딜레마를 보여 준다. 북미 관계의 진전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자면 대북 강경 자세를 바꿔야 한다. 그러나 화해 정책을 펴다간 얼마 남지 않은 보수 지지층조차 등을 돌리게 생겼다.

이 때문에 이명박은 상황의 압력에 떠밀려 임기응변하는 식으로 대처했던 조지 부시의 대북 정책 변화 과정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협의로 긴급체포하고 불구속 입건했다.

이런 식의 ‘북풍’ 이용하기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1996년 당시 정치 위기에 처한 신한국당(지금의 한나라당)은 심지어 북한 지배자들에게 휴전선에서 총격을 해 달라고 요청까지 했다. (이 점은 남한 진보진영이 남북한 지배자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함을 보여 준다.)

2006년 북한 핵실험 직후 노무현 정부도 ‘일심회’ 간첩단 사건을 터뜨려 관련자들을 속죄양 삼았고, 우파들은 이런 마녀사냥을 한미FTA 반대 운동 탄압에 이용했다. 이명박과 우파들은 이번에도 이런 속죄양을 찾으려 할 것이다.

무고한 민간인을 사살하는 체제가 사회주의일까?

이 훈련에는 무려 1만여 명의 미군이 동원될 예정이다. 북한은 이 훈련을 지난 3월 합참의장의 “대북 선제 타격” 발언과 연관시켜 북침 훈련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이명박의 대북 적대 정책은 애먼 국민의 가엾은 피살 사건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진정한 평화의 길

이번 피격 사건은 남북한 당국자들이 주도하는 교류 협력 사업이 가진 한계도 보여 줬다.

남한의 일부 우익들은 제한된 교류 사업조차 흠집내려 안달이지만, 남북 교류사업은 남한 자본가들의 탐욕스러운 요구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현대는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주고 철도, 통신, 관광, 개성공단 등 ‘7대 경협 사업’에 대해 30년간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남한 자본가들은 경협을 통해 북한의 저임금 노동자 착취를 바라며, 북한을 유라시아대륙 진출의 관문으로 삼길 바란다.

이번 사건은 이 같은 기업 진출과 경제 교류가 확대되면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는 가정이 잘못됐음을 보여 준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군축과 군사적 적대 구조 청산, 그리고 남북한 민중의 자유 왕래가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제국주의적 대북 압박과, 이에 따라 북한 전체 GNP보다도 많은 국방비를 쓰면서 진행되는 남한의 공세적 ‘군사 변환’이 한반도 평화 정착의 근본적 제약 요인인 이상, 이를 극복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노력은 ‘북풍’ 속에서도 계속돼야 한다.

비극을 사악한 목적에 이용하기

피격 사건이 이명박의 처지를 군색하게 만들었다 해서 곧 남한 진보운동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갑작스런 ‘북풍’은 대체로 남한 진보진영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남한의 우익들이 북한군의 이번 야만 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과거 그들은 북한 체제만큼이나 야만적이었던 군사독재를 지지했고, 지금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려 온갖 반동을 시도하는 자들이다. 이런 우익들은 종종

‘북풍’을 진보진영을 공격하는 데 이용했다.

이번에는 특히 촛불시위로 급진화한 사회 분위기를 오른쪽으로 되돌리는 데 이용하려 할 것이다. 우익 단체인 국민행동본부는 “[촛불] 주동세력과 50대 아주머니를 등 뒤에서 쏘고도 남한이 책임져야 한다고 우기는 세력(북한)은 같은 뿌리”라며 “촛불 난동 세력 응징” 운운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경찰은 범청학련남측본부 후원회원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경제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지 말라

강동훈 미국의 대형 모기지 업체인 '인디맥'의 파산에 이어서, 미국의 양대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파산 위험에 처하자 세계경제가 다시 크게 요동치고 있다.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무색하게 결국 미국 정부가 나서 이 국책 모기지 업체들에 값싼 신용을 대거 공급하고 필요하면 국유화하기로 했다.

한국도 외환보유액 중 5백억~7백억 달러(약 50조~70조 원)를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채권으로 가진 것으로 파악돼 이번 위기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됐다. 또, 국내 금융회사들도 5억 5천만 달러를 이들 두 업체 채권에 투자했고, 국민연금도 1억 달러 정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수출이 지탱해 주던 한국 경제도 세계경제 위기의 영향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국제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6월 무역적자가 예상보다 1억 4천9백만 달러 늘어난 4억 3천3백만 달러로 집계되는 등 무역적자는 계속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은 대기업·부유층을 위한 정책들로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긴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를 옹호하며 끝내 유임시켰다. 앞으로도 부자를 위한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요금 인상을 낳을 공기업 민영화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미 전기 요금 5퍼센트, 가스 요금 30퍼센트 인상 계획도 발표했다. 부유층을 위해 소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을 감세하는 법안도 정기국회에 내놓으려 한다.

이명박 정부는 '고통 분담'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서민에게만 전가하려 한다.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고유가

유가 급등으로 서민 경제가 황청거린다. 기름값 부담으로 아예 운행을 포기한 자가용이 늘고 있다. 유가 상승은 소비자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유가 상승은 계속되고 있고, 유가 상승의 효과가 아직 물가에 다 반영되지도 않았다.

국제 유가 상승의 주된 요인인 구조적인 수급불균형과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 투기자본의 유입 등이 해소되지 않아서 고유가는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가 되면 물가 상승 압박도 훨씬 커질 것이 분명하다.

이 속에서 거대 정유사들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엄청난 이자 소득을 누리는 부유층도 위기를 이용해서 석유 투기펀드 등에 투자해 소득을 늘릴 수 있다.

반면, 서민의 삶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는 유가 인상을 핑계로 하반기에 전기·가스·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을 인상하려 한다.

이명박 정부는 고유가 극복을 위해 서민들더러 소비를 줄이라고 하지만, 지금 문제는 서민들의 '과소비'가 아니라 생계를 위한 필수적 소비조차 위협받는 상황이다.

정중남

— 지난 1년간 상승률
(7월 1일 통계청 발표)

LPG 32.4%

등유 64.0%

경유 51.3%

고유가 시대에 꼭 봐야 할 다큐멘터리
2006년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을 제작한 이강택 PD 연출,
KBS 스페셜 '누가 유가를 움직이는가'
— 3차 오일 쇼크의 배후
7월 27일(일) 오후 8시, KBS 1TV

금리 인상은 서민 경제 두 번 죽이겠다

물가 폭등에 동반해 금리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가계 대출 금리가 7퍼센트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무려 9.1퍼센트까지 올랐다. 물가가 오르면 채권 같은 화폐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더 많은 금리를 약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금리를 인상에 시중 통화량을 줄이는 식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물가 인상은 유가·원자재·곡물 등의 비용 인상에 주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물가 억제를 위해 금리를 올릴 경우, 증시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자산 디플레'가 일어나고 기업 파산과 해고가 속출할 수 있다.

금리 인상은 노동자·서민에게 가혹한 고통을 안겨준다.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올해 3월 말까지 국민 1인당 부채가 무려 1천5백58만 원에 이른다. 고금리는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돈을 빌린 서민 가계를 빗대미로 내몰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진보적 경제학자 중 일부가 물가 인상에 대한 단기적 해결책으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개탄스럽다.

물가를 국가가 규제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내는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이성우

부동산 거품 붕괴의 위험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의 파산 위기가 확산되고, 중국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금리가 낮았던 2005~2006년에 노동자 상당수가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했다. 그때는 집값이 오르고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집값은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9.1퍼센트를 넘어서 고공행진을 시작하자 가구당 한 달에 수십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더 큰 손해를 피하려고 앞다투어 집을 팔기 시작하면, 다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가계 부채 위기가 은행 부실로 이어질 경우,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벌어지는 것이다.

1997년 경제 위기 때도 자산 가치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개인 파산이 급증했다. 수많은 서민들이 은행 빚을 갚지 못해서, 평생을 모아 겨우 마련한 집을 몬스터 같은 투기꾼들이 주도한 채권추심업체에 빼앗기고 거리에 나앉아야 했다.

집은 넘쳐나지만 소수 부유층과 투기꾼들이 수십 채씩 가지고 투기를 하고,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은 돈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다.

정중남

국민1인당부채

1천5백58만 원

누가 물가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나

이명박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임금 인상→물가 상승'의 악순환 운운한다.

그러나 인건비가 제조업 기업의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10퍼센트 남짓이다. 임금이 10퍼센트 오르면 제품의 최종 소비자 가격은 0.6~0.8퍼센트 정도 오르는 셈이다.

더구나 임금이 올라도 노동생산성이 그만큼 오르면 제품 가격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제품 원가가 떨어지는 효과를 낸다. 미국 노동부 통계를 보면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리고 1990년 이후 거의 매년 실질임금 상승률은 생산성 증가율에 크게 못 미쳤다.

따라서 임금이 오르면 무조건 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임금이 아니라 유가, 원자재 가격, 사교육비 등이 물가 상승을 이끌어 왔다.

국내 정유회사들을 포함한 대재벌의 독과점 가격 책정,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각종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도 고물가의 원인이다.

예를 들어, SK·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등은 원유도 입가보다 훨씬 비싼 국제현물가를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해서 어마어마한 마진을 붙여 판매한다.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밀가루는 CJ 등 3개 기업이 국내 시장의 75퍼센트를, 설량은 CJ 등 3개 기업이 1백 퍼센트를, 세제는 LG 등 4개 기업이 90퍼센트를 독점하고 있다.

수출 대기업을 위한 교환을 정책도 수입물가지수가 44.6퍼센트나 뛴 이유 가운데 하나다. 44.6퍼센트 중 17퍼

센트는 환율 상승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투쟁은 완전히 정당하다.

김여진



서민 고통 해결을 위한 요구들

강동훈

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실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물가 인상에 대한 국가규제

물가 폭등 속에서 노동자·서민의 생활수준을 지키려면 정부가 나서서 물가 인상을 통제해야 한다. 특히 대형 정유사들이나 식품회사들은 자신의 이윤은 전혀 줄이지 않고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상품 가격만 마구 올리고 있다.

정부가 국내외의 거대 석유·식품 업체 등을 통제하면서 생필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물·전기·가스·통신·교통 등의 공공서비스 가격 인상을 낳을 공기업 민영화를 중단하고 오히려 민영화된 정유사와 통신업체 등을 재국유화해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 생활물가 인상률을 뛰어넘는 임금 인상

임금 인상은 물가 인상의 원인이 아닐뿐더러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자제해도 기업주들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한다. 오히려 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지키는 데도 도움을 준다.

임금이 물가 이상으로 오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더 후퇴한다. 물가 인상률을 넘는 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이 생활수준을 지켜야 하고 터무니없이 낮은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해야 한다. 양극화의 주범인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동일노

● 사회복지 대폭 확대

한국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사회복지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이 서민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노후 복지를 위한 국민연금은 지급액이 매우 적다. 따라서 정부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고, 실업자·구직자·노인 등에게 충분한 연금을 지급하는 한편,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의료 영리화와 의료보험 민영화가 아니라 건강보험만으로 모든 질병을 추가 부담 없이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액의 대학 등록금을 없애고 국가 지원을 늘려야 할 뿐 아니라, 사교육비 폭등의 근원인 대학 서열화와 입시 경쟁을 철폐해야 한다.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자원은 모두 재벌·부유층에게서 얻어야 한다.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을 올리고 누진율을 높여 직접세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대중투쟁이 꼭 필요하다. 경제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만큼 이명박과 지배자들이 쉽게 양보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벌어진 대규모 노동자 투쟁은 노동시간 단축이나 사회복지 확대를 쟁취했다. 기업주들의 이윤을 위협하는 거대한 노동자 투쟁을 벌일 때만 양보를 얻어 내고 노동자·서민의 생활수준을 지킬 수 있다.

“IMF 위기 때처럼 고통 분담하자”고?

IMF 경제 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 - 재벌들은 금 수출을 조작해 부당하게 2조 원의 세금을 환급 받았다

이명박은 'IMF 때처럼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1997년 말, 심각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나라 부유층과 특권층은 손뚱만팠고 고통을 분담하지 않았다. 심각한 불경기의 고통은 전부 노동자·서민에게 떠넘겨졌다.

● 1998년 초 재벌 총수들의 주식 보유는 급증했다 — 현대그룹 정몽현은 1년 전보다 9백8억 원, 삼성그룹 이진희는 8백21억 원, 대우그룹 김우중은 7백96억 원 등. 반면, 소액 투자자들은 주가 폭락으로 크게 손해를 봤다.

● 1998년 초 한보그룹 부회장 정한근이 스위스 비밀계좌에 4백60억 원을, 동아그룹 전 회장 최원석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 대금 중 수십만 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사실이 폭로됐다. 당시 검찰총장 김대정은 뻔뻔스런 말을 늘어놨다. “정부는 누가 얼마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고, 그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정보를 갖고 있다. … 액수가 너무 엄청나 국민들이 알 경우 난리가 날 것이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규모는 말할 수 없다.”

● 당시 부유층의 전형적인 태도는 한 상류층 자녀가 내뱉은 말로 압축된다. ‘IMF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재가 달라져야 해요?’(SBS <뉴스추적>, ‘상류사회, 그들만의 천국’, 1998년 4월 7일치)

● 당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은 겨울철 내복 입고 운동으로 난방비를 32억 원이나 절약했다. 대우차 노동자들이 실내용도 15도 이하를 견디며 일하는 동안 청와대와 국회 의원회관의 실내온도는 25도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

● 노동자들은 내뱉을 강요당했다. 이미 1997년 4분기부터 교육비 지출은 전년 동기보다 2.8퍼센트, 피복·신발은 18.2퍼센트, 가구·가사 비용은 15.2퍼센트, 교양·오락비는 9.5퍼센트가 줄었다. 서울시내 공립 중고교의 1997년 수업료 미납 총액은 전년도보다 여섯 배나 늘었다. 공기업 민영화와 기업 구조조정, 인수·합병에 따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노숙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 <조선일보>는 10년 전에도 ‘금 모아 나라 살리기 운동’에 적극 찬성하면서 ‘고통 분담론’이 노리는 바를 이렇게 표현했다 — “이 위기를 누가 만들었냐고 책임을 따지기 전에 남녀노소 구별 없이 합심하여 나라 살리기 운동에 참여시키는 것.”(1998년 1월 13일치)

지금의 ‘고통 분담론’도 IMF 때와 똑같은 더러운 의도에서 나오고 있다. 국내외 대자본가들이 자초한 경제 위기의 책임 소재를 흐리고, 경제 위기 속에 벌어질 노동자 투쟁을 억누르고,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서민에게 떠넘겨서 지배자들의 기득권을 고스란히 지키려는 것이다. 이 속임수에 결코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박중호

크리스 하먼

세계 경기 침체와 사회·정치 투쟁

침체의 여러 요소들이 갖춰져 있음은 명백하다. 침체의 골이 얼마나 깊을지는 예측 불가능하다. 3천~4천 개의 다국적기업과 1백50여 개 정부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단지 침체뿐 아니라 이중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발 경기 침체가 한 편에 있고 중국에서 발전하고 있는 위기가 다른 한 편에 있다.

두 위기는 서로 연결돼 있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자본주의는 전반적으로 매우 느리게 성장했다.

일부 지역의 경제가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긴 했어도 전체적인 성장률은 낮았다.

그런 상황에서 1990년대 중후반에 미국 경제가 갑자기 호황을 겪었다. 중국도 성장을 거듭하면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점 커졌다.

그러다가 미국 경제가 2000년에 위기에 빠졌고, 거품을 키움으로써 그 위기를 해소하려 했다.

미국은 약 6년 동안 이렇게 거품을 통해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했다. 그동안 중국은 계속 성장했다. 그러다가 미국은 거품이 꺼지면서 현재의 위기를 맞았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계속돼 온 성장세는 세계 도처에서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

자본주의 체제로서는 다음 사항이 문제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미국의 중앙은행)의장 버냉키는 또 다른 거품을 유발하려 한다.

그러나 이 두 번째 거품은 이제 물가 상승이라는 문제에 봉착했다.

그러자 갑자기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지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됐다. 중국은 이미 금리를 올리는 중이다. 그래서 혼란이 극대화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추락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이 지배계급을 불안정에 빠뜨린다는 것이다. 또한 침체와 물가 상승의 조합은 자본가들에게 끔찍한 시나리오다.

한국에서 [IMF 경제 위기를] 경험해 봐서 알겠지만 경기 침체만으로는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할 수는 있어도 6개월 정도 지나면 분노가 사기저하로 이어진다.

그러나 물가가 상승하면 노동자들은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에게 가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된다. 농민들은 절박해진다.

도시 빈민이라면 동네 빵집에서 빵 가격을 두 배로 인상할 경우 빵집에 항의할 것이다.

모든 것이 불안정해지며, 바로 그런 불안정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부 나라 지배계급에게는 지금이 1974~75년 이래 최대의 위기 상황이다.



7월 13일 말레이시아 물가 인상 항의 시위

경제 위기와 사회·정치 투쟁, 제국주의와 전쟁

국제적으로 저명한 맑스주의자이며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인 크리스 하먼과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세계 경제 위기와 전망(8면)과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 방향(9면)에 대해 다함께 국제팀의 C.J 박에게 말한다. []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자가 첨가한 것이다. (녹취·번역 동시통역사 천경록)



크리스 하먼

중국이 위기의 세계 경제에 구원 투수 구실을 할 수 있을까?

중국 경제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데, 자본 축적 속도가 특히 높으며 호텔과 상업점 등의 건설 수요가 많다. 그러나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달러로 환산한 중국 경제의 규모는 기껏해야 독일 경제와 비슷한 정도다. 세계 경제의 기관차 구실을 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또한 중국이 앞으로 몇십 년이든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사람들은 1996년에도 한국이 계속 성장할 거라 말했고 1990년에 일본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했다. 그러니 선부른 단정은 금물이다. 만약 중국이 향후 20년 동안 계속 성장한다면 한국 경제를 위해 수요를 늘려 주겠지만 [중국이 계속 성장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1930년대 대공황과의 차이

현 상황이 [1930년대] 대공황과 다른 점은, 내가 보기에 매우 중요한 것인데, 미국 경제가 그 이상 추락할 수 없는 안전판을 군비 지출이 마련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오늘날 대자본들이 1930년대와 같은 대공황의 파괴력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 수단을 동원해 그러한 공황을 방지하려 들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나는 대공황보다는 일본[의 장기 침체]과 비슷한 시나리오를 예상한다. (점쟁이로 오해받을까 봐 장담은 못 하겠다.) 일본은 1991년까지 세계 2위의 경제 초강대국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일본을 오늘날의 중국과 똑같이 바라봤다.

그러나 오늘날 서방 세계에서는 일본이 여전히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임에도 아무도 일본을 거론하지 않는다. 근 16년 동안 일본은 정체와 1퍼센트 성장을 거듭했다. 세계 곳곳에 진출해 있고 전 지구적 헤게모니를 추구하는 미국이 똑같은 일을 당한다면 엄청난 굴욕일 것이다.”

급진 좌파의 임무

이런 경제 위기에 직면해 전 세계 급진 좌파[시장경제에 타협하지 않는 좌파를 가리킴]는 두 가지를 해야 한다. 먼저 우리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관해 얘기해야 한다. 우리는 식량 위기의 원인을 알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해 추악하다. 사람들이 굶주리는 판에 식량으로 자동차 기름을 만들고 있다. 미 의회는 미국 농가들이 옥수수로 자동차 연료를 만들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죽었다. 이는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범죄다. 이런 것이 자본주의의 논리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의 원인을 자본주의로 설명하고 사회주의를 그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모든 형태의 저항에 참여해야 한다. 급진 좌파가 단 한 명도 없는 세상에서도 시위와 파업과 폭동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폭동의 표적을 소수 인종이나 이민자 등에게 돌리려는 사람도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세계 각지에서 식량 폭동도 있었지만, 또한 이탈리아에서 로마집시의 일부들을 겨냥한 폭력도 있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짐바브웨인들이 공격받기도 했다.

그래서 급진 좌파는 개입해야 한다. 운동에 개입할 때 급진 좌파는 물가 상승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싸우게 만들고 그들에게 일체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한편, 투쟁 속에서 노동자 이외의 집단을 위한 요구들도 제기해야 한다.

가령 남아공 노동자들은 직장이 없는 도시 빈민들을 위한 요구도 함께 제기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과 연결시켜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부시와 이스라엘이 극도로 위험한 모험을 벌이려 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가능성과 오바마의 우경화

앞으로 몇 달 내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꽤 크다는 것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한 가지 시나리오는 이스라엘 정부가 엄청난 정치 위기에 빠져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란을 공격하는 것이다.

또는 이스라엘이 가을쯤에 공격을 감행하도록 부시가 부추길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매케인이 유리해질 거라는 계산을 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대선이 끝나고 당선자 취임 전에 공격이 이뤄질 수 있다고도 본다. 이는 모두 미국 국내 정치와 연결돼 있다.

어떤 경우든 부시 일당은 전 세계 지배계급은 물론이고 미국 지배계급 내에서도 소수파가 될 것이다. 매우 위험한 모험이기 때문이다. 이란은 반격할 것이라고 밝혔고 실제로도 여러 방식으로 반격을 가해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그러나 두루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서 핵 패권을 지키길

원하고 있고, 네오콘들도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의 전략을 계속 추구하려 한다.

미국 내 정치 환경도 그들의 전략 추구에 좀더 유리해졌다. 따라서 그들은 이란 공격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의 판단이 오판임은 거의 확실하다. 하지만 어차피 그들은 그다지 이성적인 존재들이 아니다.

최근 오바마가 우경화하는 이유

오바마가 결국 대선후보로 지명됐기 때문이다. 그는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전쟁에 반대하고 2004년 존 케리의 대선 운동에 실망한 사람



알렉스 캘리니코스

들에게 호소함으로써 대선후보 자리를 굳힐 수 있었다.

오바마 자신이 반전주의자로서 경력이 확실했고, 그 덕에 2003년에 전쟁을 찬성했던 힐러리를 몰아낼 수 있었다. 그 때까지는 오바마도 전쟁 반대 입장을 고수할 필요가 있었다.

대선에서는 항상 중도주의가 득세한다는 통설도 있지만 그게 항상 진실은 아니다. 가령 2000년과 2004년 대선에서 부시는 중도를 추구하지 않았다.

오바마가 우경화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제국을 운영하기에 안전한 사람임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다. 결정적인 순간은 오바마가 몇 주 전에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에서 자신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며 이스라엘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을 때였다. 사실상 그는 “저를 믿어도 괜찮아요”라고 말한 셈이다.

그가 철군 입장에서 뒷걸음치고 있는 등의 행보를 보이는 것도 이로써 설명이 가능하다. 이는 지극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물가 인상과 신자유주의에 맞선 라틴아메리카 노동자 투쟁

브라질 석유 노동자 투쟁

7월 14일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에 고용된 4천5백 명의 노동자들이 법원의 파업 금지 명령을 어기고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노동자들은 브라질의 하루 원유 생산량 1백80만 배럴 중 80퍼센트를 생산하는 캄포스 유전에서 일한다.

석유 노동조합은 14일의 작업 일정이 끝난 후 하루치 일당을 더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원들은 2002년 이후 페트로브라스의 이윤이 두 배로 났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페트로브라스는 브라질 노동법원에서 간신히 파업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었고, 노동법원은 파업을 하루 할 때마다 노조에 한화로 3천만 원의 벌금

을 물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석유 노조의 지역 위원장인 호세 마리아 랑헬은 “우리는 물러설 생각이 없다. … 우리는 생산에 큰 타격을 입힐 각오가 돼 있다”고 결의를 다졌다.

페트로브라스 노동자들은 석유 생산을 멈출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석유 가격이 오르고 세계적으로 석유 자원에 대한 투기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페루 노동자·농민 투쟁

지난주 페루에서는 수만 명의 노동자·서민들이 대통령 알란 가르시아의 시장경제 정책에 맞서 파업에 돌입하고 가두시위를 벌였다.

수도 리마에서는 3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전국 곳곳에서 시위 참가자들은 도로를 봉쇄하고 공항과 철로를 점거했다.

교사 노조와 농민 조합이 이 행동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분노한 다른 노조들도 여기 가세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대통령 가르시아가 자신의 좌파 지지자들을 배신한 것을 비판했다.

가르시아는 지난해 말 미국과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노동자들은 이것이 페루의 공업·농업·식량 안정을 위협한다고 말한다.

노조들은 올해 페루 경제성장률이 9퍼센트에 이를 것이지만 노동자들은 이득을 얻지 못할 거라고 말한다. 동시에 노동자들은 식료품 가격 폭등을 포함해 생계비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란 위협을 중단하라

조명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20일에는 이스라엘 공군이 전투기 1백 대를 동원해 이란 핵시설을 겨냥한 모의 군사 훈련을 실시했고, 28일에는 페르시아만에서 미 해군이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갖춘 이지스함의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다.

이란 공격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스라엘 지배자들은 심도 깊은 협의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7월 2일엔 미국 합참의장 마이클 멀린이 이스라엘을 방문했고 10일엔 이스라엘 정보기관 국장이, 14일엔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미국을 방문했다. 21일엔 이스라엘 군 참모총장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전 UN주재 미국 대사이자 네오콘으로 널리 알려진 존 볼턴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최적 시점은 미국 대통령 선거일인 11월 4일과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1월 20일 사이”라는 구체적 전망까지 내놔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다면 미국 정부와 협의 아래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에게 이란 문제는 미룰 순 있어도 피할 순 없는 문제다.

미국이 이라크 점령에 실패하며 비틀거리는 동안 중동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커졌다. 미국이 이라크를 통제하기 위해 내세운 총리 알 말리키는 시아파 종교 지도자로 같은 시아파의 국가인 이란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다. 1만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미국이 이란의 핵 위협을 과장하는 것은 중동에서 이란의 커진 영향력을 견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핵독점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란이 실제 핵무기를 보유해 중동에서 자신의 핵독점이 깨지는 것을 실제로 엄청난 위협으로 느낀다. 자신의 골칫거리인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뒤에 이란이 있다고 여기기도 한다.

미국은 유럽연합과 손을 잡고 이란에 이런저런 압력을 넣고 경제 제재로 이란을 고사시키려 했지만 그마저 쉽지 않았다. 이란은 국내 자원이 워낙 풍부한데다 미국을 견제하려는 중국·러시아와 동맹을 구축해 경제 제재의 효과를 떨어뜨렸다. 미국의 경제 제재에 동참해 이란 천연가스 사업에서 손을 뗀 프랑스 기업 토탈의 자리를 사흘 만에 러시아의 가스프롬이 꿰찬 것은 가장 최근 사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군사적 해결책에 유혹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점령의 실패는 미국의 운신의 폭을 매우 좁혀 놨다.

게다가 이스라엘을 통해 대리전을 치르기로 결정하더라도 지난 2006년 이스라엘이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승리가 보장된 것도 아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은 미국의 이란 공격의 전초전 성격이 강했다.

이런 모순된 처지 때문에 이란 공격 문제를 두고 미국 지배자들은 현재 분열해 있다.

부통령 딕 체니는 무력 외에는 이란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여긴다. 반면 합참의장 마이클 멀린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제3의 전선을 만드는 이란과의 전쟁은 미군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반전 운동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부를 끔찍한 결과를 경고하며 그것을 저지할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힘인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국민의 주머니를 훔치는 2MB

2MB를 보면 “BBK 도둑놈이 대통령 됐으니 국민 주머니 채우기보다 훔치는 일을 더 잘하겠다”던 어떤 택시기사의 말이 생 각난다. 유모차 끌고 시장 가면 동네 사람들이 입 모아 하는 말이 “장사가 너무 안 된다. 경제 살리겠다더니 미국 쇠고기나 수입해 국민 죽인다. 미국 위해 일하라고 뽑아놨냐”다.

혼자 생활할 때 월급 1백만 원 받아 단돈 10만 원 저축이 어려웠고, 결혼 후 맞벌이를 해도 혜택 보지도 못할 고작 2만 원짜리

청약저축이나 들었을 뿐이다. 한 아이의 부모인 우리는 지금 월 지출이 수입을 초과한다. 그나마 모유로 분유 값을 아껴 다 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분유, 기저귀, 병원비 등 아이에게 월 40만 원은 족히 들어간다. 유가 폭등에 가스요금은 40퍼센트 올랐고 전기요금도 계속 오른다. 어린이집은 한 달 최고 70만~80만 원까지 하니 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감히 소박한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

그나마 촛불이 위안이다. 촛불집회에서

주부들이 “도대체 2MB의 경제 살리기에 서민이 포함되어 있진 한 거냐. 그래서 나왔다”고 한다. 촛불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나의 문제로 인식하게 됐다.

나는 아줌마의 힘, 월급쟁이들의 땀, ‘노가다꾼’의 굳은살, 힘없는 자의 설움을 안다. 만약 18대 국회가 또 국민들의 요구를 모른 척한다면, 촛불 바다는 파도가 되고 폭풍이 되어 세상을 뒤엎어 바꿀 것이다.

새롬이 엄마

이제덕 씨를 핼박 말라

촛불집회 진압에 반발해 육군 복무 전환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영창 40일을 산 전투경찰 이제덕 씨가 그것으로 도 모자라 계속 ‘동성애자’라느니, ‘부대 적응을 못했다’느니, ‘과거에 민주노동당원이었다’느니 하며 경찰과 우익들에게 마녀사냥 당하고 있다.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저항한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성공회대 학생이자 개인적으로 알고 지냈던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안타깝다.

그는 청소년들이 당하는 억압에 대해 할 말은 하는 활동가였다. [우익들이 부추기는 편견과 달리] 동성애는 이성애처럼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경찰은 이제덕 씨가 13명의 동료로 성추행했다고 하지만 그의 친구인 강 의석 씨 말대로 “(13명의 동료 안에는) 선배들도 있는데”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제덕 씨를 위해서도 이명박이 물러나는 그날까지 촛불시위를 계속해야 한다.

김재원

잘못은 저들이, 고통은 우리가?

우리 형은 삼성에서 일하는데 회사를 나올까 고민한다. 하루 12시간 넘게 주말도 없이 일을 하니 사람 사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너희가 가난을 몰라서 그렇다며 남들은 직장을 못 구해서 난리라는데 왜 그러냐며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는 결혼 전에 직장에서 각종 제를 먹여가며 일을 한 적도 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일해서 얻은 자식들의 삶은 고작 88만 원 비정규직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기계인지 사람인지도 알 수 없는 생활인가.

서민들은 언제나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경제 정책은 정치가와 기업인들이 결정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실패의 책임을 고통 분담이라며 서민에게 떠넘겼다. 물가가 오르는데 최저임금을 동결하라는 거나 대중교통은 안 늘리면서 차량 혼잡제로 초만원 버스를 타게 만드는 작태도 그렇다. 잘못은 그들이 하는데 벌은 우리에게 내린다.

이명박도 마찬가지다. 촛불시위 때문에 경제가 나빠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서민경제를 망치고, 더욱 망치려 하니가 촛불이 번지는 것이다.

이명박의 험난할 5년을 우리 영광의 5년으로 만들자.

박태현

‘촛불 수배자’들을 응원하며

고즈넉한 새벽 5시, 108배와 함께 조계사 농성단의 하루가 시작된다. 나는 ‘촛불 수배자’들을 도우려고 종종 천막에 머문다.

며칠 전에는 우익 단체들이 수배자들을 끌어내려 한다는 제보가 들어오자 얼마 되지 않아 50여 명이 집결하기도 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지지방문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왕래하는 불자들도 “훌륭한 일 하는데 우리가 지켜 드려야지” 라며 인사해 주신다. 넘쳐나는 음료수로 냉장고는 포화상태다. 한 어르신은 “이명박 씹듯 잘근잘근 씹으라”며 간식거리로 해바라기씨를 주고

가셨다.

비좁은 공간에서 무더위와 싸우고, 절안에서 살생을 할 수 없어 모기도 못 잡지만 표정만은 밝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을 지지한다는 것을 어디서나 느낄 수 있다.

농성장은 비교적 평화롭지만, 몇 걸음만 나오면, 곳곳에 서성이는 사복경찰과 길 건너편의 닭장차들이 다시금 우리를 긴장하게 한다.

하루빨리 수배자들과 함께 삼겹살에 찬소주를 기울이며 우리의 승리를 기뻐할 날이 오기 바란다.

김태윤

지난 호 독자편지에 대한 반론

북한은 독재 · 계급사회입니다

내가 쓴 <맞불> 94호의 <크로싱> 영화 평에 대해 김대현 씨는 95호 독자편지에서 북한 정권이 ‘반미반제적 입장’을 갖고 있으며, 수구보수 세력의 눈으로 북한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물론 우리는 미국이 인권 개선을 빙자해 벌이는 제국주의적 대북 압박에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개인의 인권을 돌보지 않는다’는 우익의 역겨운 공격에 대응하고, 사회주의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서도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 경로로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인도주의적 구호 단체들이 현지 조사 등을 통해 내놓는 보

고서들이 있고,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밝힌 명백한 사실도 있다.

북한은 2003년 3월 UN인권이사회에 공개처형을 시인한 바 있고 1995년에 국제앰네스티에 정치범의 존재를 인정했다. 북한 형법 등에 있는 ‘정치범에 대한 사형’, ‘반국가범죄에 대한 연좌제’ 등은 남한의 국가보안법을 연상케 한다.

북한 정권이 일관된 반(反)제국주의 세력인지도 의심스럽다. 북한 정권은 미국의 대북 압박에 저항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미국과의 수교, WTO 가입 등으로 ‘세계경제’에 편입하길 원한다. 김정일은 2002년 방북한 당시 일본 총리 고이즈미에게 “부시 대통령과 밤새 목이 쉬도록 노래 부르고 춤추고 싶다”고 했고, 북한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표명했다. 지난해 11월에 조선중앙통신은 “테러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미국과의] 국제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을 비판하는 시각 모두를 ‘수구보수 세력의 주장’쯤으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함께’는 북한을 사회주의가 아닌 국가자본주의 사회로 보며 북한의 여러 문제를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탓으로 본다. 우익의 반공주의와 달리, 다함께의 입장은 남북 양 체제에 반대하는 변혁적 입장이다.

우리는 미국의 대북 압박에 반대하면서, 동시에 북한 정권의 억압과 착취에 반대하고 북한 민중의 저항을 지지해야 한다.

김영익

포럼에 초대합니다

대학 맑스주의 포럼
747 파산과 경제위기 — 원인과 해법은?
연사 김용욱(주한 (저항의 촛불) 기자)
7/23(수) 오후 4시 30분
이화여대 포스코관 360호
문의 010-2263-1106 / 참가비 2천 원

대학 맑스주의 포럼
물가 폭등, 747 정책 파산 — 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안은 무엇인가?
연사 정종남(투기자본감시센터 기획국장)
7/24(목) 오후 4시 / 한양대 사범대 404호
문의 011-222-6981 / 참가비 없음

서울 동부 지역사회포럼
이명박의 747 파산과 경제위기 — 원인과 해법은?
연사 강동훈(주한 (저항의 촛불) 기자)
7/24(목) 오후 7시 30분 / 건국대(추후 공지)
문의 011-9038-0657 / 참가비 2천 원

주제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함께에 가입하세요!

활동 소개 및 안내, 회원가입, 후원하기 등 각종 문의 사항은
02-2271-2395 또는 atgmail@nate.com 으로 연락주세요.
다함께가 주최하는 포럼이나 강연회, 거리 가판에서도 얼마든지 물어 봐 주세요.

조중동 같은 기성 언론은 진실을 은폐하려 합니다. 우리가 홀어린 개인이라면 부당한 권력에 맞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함께는 이 사회의 감춰진 진실을 알리기 위해 주간 <저항의 촛불>을 발간하고,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또한 거리와 대학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대중 행동을 함께하면서, 자본주의가 낳는 온갖 불의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명박에 맞선 저항이 승리하기 위해선 토론을 통해 효과적인 전략을 논의하고 함께 실천하는 단체가 필요합니다.

다함께에 가입하셔서 여러 활동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참여해 보세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에 함께합시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694701-01-227958(예금주 : 백은진)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www.alltogether.or.kr

‘다함께’는 1995년 프랑스 공공부문 총파업과 2000년 프랑스 니스에서 있었던 국제 반자본주의 시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호였던 ‘투장상블’(Tous Ensemble)에서 따온 이름으로, 다양한 운동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한국타이어

이명박 사돈이 만든 ‘죽음의 공장’

숨이 턱턱 막히는 유기용제와 살인적인 노동 강도로 악명 높은 ‘죽음의 공장’ 한국타이어에서 최근 또 한명의 노동자가 폐가 딱딱하게 굳어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했다. 최근 사측이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2천여 명이 재검대상이 될 정도로,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건강은 매우 위험한 상태다. 정부 발표로만 2006년 5월~2007년 9월에 심장질환, 폐암, 뇌수막종 등으로 15명의 노동자가 집단 사망했고, 사망자가 10명 더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타이어의 연간 협심증 유병률은 전국 평균보다 2백44배나 높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은 사돈 기업 한국타이어를 감싸는 데만 급급하다. 그 결과 특별근로감독으로 적발된 1천3백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도 처벌하지 않는다. 한국타이어 자회사 ASA 노동자들은 직장 폐쇄 등에 항의해 한국타이어 본사를 점거하는 등 투쟁을 벌여 왔다. 한국타이어 노동자들도 이런 자회사 노동자들의 투쟁에 영감을 얻어 노조를 민주화하고 투쟁에 나설 수 있길 바란다. 그래서 ‘노동자 연쇄살인’ 행렬을 멈춰야 한다.

박설

정치 신문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지난 7월 2일 금속노조가 미친 소 반대 2시간 파업을 단행했다. 이날 기아차 화성공장에서는 악천후에도 1천5백여 명이 모여 출정식을 진행하고 조합원 3백여 명이 시청 광장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시청까지는 최소 2시간이 걸린다. 밤 11시에 서울에서 출발해 집에 가면 아무리 빨라도 새벽 1~2시에 취침하게 된다.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조합원들에게 저녁 촛불집회 참가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날 내 담당 선거구와 근무 부서에서 가장 많은 조합원이 참가했다. 나중에 따져 보니 참가자 대부분은 <맞불>을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조합원들이었다. 내

가 담당하는 선거구 조합원 10명이 집회에 참가했는데, 이 중 7명이 <맞불>을 정기적으로 구독한다. 노조 지도부가 정치파업에 소극적이고 우천과 먼 거리 등 악조건에도 이들이 집회에 참가한 것을 볼 때 정치 신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김우용(기아차 화성공장 노동자)

주간 <저항의 촛불>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최근 우편요금에 30퍼센트
가량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 <저항의
촛불> 정기구독 우편요금도 인상합니다.

6개월 2만 7천 원
(신문값 20,000원 + 우송료 7,000원)

1년 5만 4천 원
(신문값 40,000원 + 우송료 14,000원)

웹사이트에서도 정기구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resistcandle.com reader@resistcandle.com

전화 : 02-2271-2395
계좌 번호 : 국민 048402-04-014849(예금주 백은진)

유용상

YTN 노동자와 시민 들이 낙하산을 막아 내다

YTN 주주총회가 있었던 7월 14일 YTN 사옥 앞을 찾았다. 시민과 방송노조원 등 3백여 명이 건물 앞뒤를 둘러싸고 앉아 “방송 독립”과 “구본홍 사퇴”를 외치며 공정한 방송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모았다. 어떤 이는 며칠 동안 YTN 사옥 앞에서 단식투쟁을 했고 어떤 이는 긴 밤을 꼬박 새

워 자리를 지켰다. SBS, OBS, MBC, KBS 방송노조원들도 하나로 뭉쳤고 오늘날만큼 다 내 일처럼 힘을 쏟았다. 감동적이었다. 2시간쯤 지났을까? 주주총회가 무산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노조 위원장은 “여러분들이 지켜주신 덕분”이라고 시민들에게 공을 돌렸다. [오늘 우리는] 학생, 어른,

남녀노소 모두 하나가 돼 외쳤다. 하지만 총회는 연기됐을 뿐 [이명박이] 또다시 어느 곳에서 술수를 쓸지 모르는 일이다. “머슴이 되겠다”고 한 이명박 대통령, 국민을 머슴으로 보지 마라! 국민 앞에 무릎 꿇어라!

유용상



소식/보고

2008년 8월 11(월)까지 지역과 대학, 작업장의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letter@resistcandle.com

금속노조 산별 교섭의 아쉬움과 과제

금속노조 지도부는 최근 금속 산별 중앙교섭에 내년부터 참여하겠다는 대우차의 잠정 합의안을 승인했다. 대우차의 잠정 합의안 내용은 지난해보다 일부 진전했지만, 산별 중앙교섭에는 못 미친다. 금속 산별 중앙교섭은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담고 있고, 개별 작업장을 넘어 15만 금속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또한, 자동차 4사가 산별 교섭 참여를 내년으로 미룰 수 있는 핑계거리를 만들어 줬다. 나아가 7월 15일 금속노조 지도부는 현대·기아차가 중앙교섭 참여를 확답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교섭을 타결지었다.

금속노조 지도부가 지난 2주간 부분 파업을 잘 수행한 금속 조합원들을 믿고 중앙교섭 성사를 위한 파업 확대를 결정했으면 중앙교섭 성사는 가능했을 것이고 기업주들에게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낼 수 있었을 것인데 유감스러운 일이다. ‘쇠고기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금속노조 간부 32명에게 체포영장이 나온 상황에서 더 강력한 투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별 보충 교섭과 파업이 남아 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임금 인상과 단체협약, 주간 연속 2교대를 둘러싼 강도 높은 투쟁이 예상된다. 기아차는 지

난해 적자를 핑계로 현대 자본이 임금 동결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기아차 사장 정의선(정몽구의 아들)은 적자가 발생했는데도 주식배당금으로 무려 60억 원이나 챙겨 드셨고 그 애비 정몽구 역시 3백8억 원의 주식 배당금을 받았다. 따라서 금속의 현장 활동가들은 중앙교섭이 끝난다 해도 단위 사업장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런 투쟁을 촛불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도 헌신적으로 해야 한다. 김우용(기아차지부 소속 금속노조 중앙위원)

물가 폭등의 원인과 대안을 논의한 토론회

지난 7월 11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 ‘물가 폭등, 해결책은 없는가?’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물가 폭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였다. 발제자인 전성인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물가 상승 위험을 애써 도외시키고 무리하게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해 물가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전·월세를 포함한 실제 생계비 상승률은 12.4퍼센트나 된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5월 공식실업률은 3퍼센트(75만 명)지만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와 취업준비자, 구직활동을 쉬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실제 실업자는 3백35만 명(12.6퍼센트)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성인 교수가 제시한 “금리 인상”과 “고통 분담”은 해결책이 아니다. 금리 인상은 대출과 은행 빚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많은 노동자·서민의 생활을 벼랑 끝으로 몰 것이다.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한다면 공기업을 고용 축소 움직임을 중단하고,

대기업도 고용 부담 차원에서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진보정치연구소 민경우 팀장의 주장도 우려했다. 기업과 정부는 노동자 투쟁을 자제시키고 임금 인상을 억제해 자신들의 이득을 보전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고통 분담”이 아니라 저들이 경제 위기의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고 싸워야 한다. 최미선

관악구를 밝힌 촛불

서울 관악구에서도 5월부터 주민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지난 5월 20일 ‘미친소 미친교육 반대를 위한 관악연대’에서 주최한 촛불집회에는 4백여 명이 참가했다. 7월 4일에도 1백50여 명이 신림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행진했다. 시위대는 대로와 관악 중앙시장을 지나 행진했고 구호를 외치며 7월 5일 집회 홍보 유인물을 배포했다. 시민들은 박수를 쳐 주고 유인물을 받아갔다. 7월 6일 이후 촛불에 대한 경찰 탄압이 강화되자 한 네티즌의 발의로 지난 7월 9일에 신림역 앞에서 촛불을 밝혔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지지와 음료수, 김밥 등의 지원도 계속 됐다. 11일에는 주경복 서울시 교육감 후보 관악 선거대책위원회의 개소식을 마치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정당과 관악지역 단체의 회원들이 참가해 30여 명이 함께 촛불을 들었다. 전호진

가야 할 길을 보여 준 금호타이어 노동자들

구조조정 방침에 맞서 전면 파업에 돌입한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승리했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하루 50억 원의 손실을 입힌 전면 파업 나흘 만에 4백31명 구조조정안을 철회하고, 기본급 3퍼센트 인상, 상여금 50퍼센트 인상, 성과급 2백50만 원 지급 등의 양보안을 내놓았다. 이 때문에 재계와 일부 보수 언론은 ‘퍼주기식’ 협상이라고 불평했다.

금호타이어는 그 동안 임금 인상 자체와 노동강도 강화를 강요해 왔다. 그래서 지난해 5명의 노동자들이 과로 등으로 숨졌고, 한 노동자는 24일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근무한 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쓰러져 죽었다. 이런데도 금호타이어 사측은 이윤이 줄어들자 ‘경쟁력 강화’를 한다며 10퍼센트 인력 감축을 밀어붙이려 한 것이다. 노동자들이 사측의 공세를 잘 막아냈

지만, 대폭 오른 물가를 감안하면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 인상률에 합의한 것과 노동강도 강화로 연결될 수 있는 ‘생산성 향상’에 합의한 것은 아쉽다. 그럼에도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진정한 노동자 살리기는 ‘회사 살리기’를 위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단결 투쟁임을 보여 줬다. 강철구

부시 방한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

한규한

“인간 쓰레기 부시의 방문을 반대하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2005년 11월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 마라도나의 말이다. 부시가 가는 곳엔 어김없이 그의 방문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뒤따랐다. 부시가 전 세계를 더럽히는 온갖 쓰레기 같은 정책들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8월 5일 전 세계 공공의 적 조지 부시가 한국에 온다. 무엇보다 부시는 촛불 저항으로 궁지에 몰린 그의 “애완견”을 위로하며 흔들림 없이 마친 소 수입을 지속하라고 독려할 것이다. 그러나 조지 부시 방한에 반대해야 할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다국적기업의 천국 만들기

이명박이 민영화, 구조조정 등으로 한국 서민의 삶을 파괴한다면 부시는 전 세계에서 그런 짓을 하고 다닌다.

2000년 부시가 후원하는 미국 기업 벡텔은 볼리비아 수도 사업을 인수한 뒤 수도 요금을 2백 퍼센트나 올렸다.

미국이 주도하는 WTO, IMF, 세계은행 등이 개발도상국에 강요한 민영화와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각종 공공서비스와 복지 정책들이 훼손됐다. 대량 해고가 판을 쳤고 비정규직이 확대됐다.

부시는 미국 국내에서도 악명 높은 민영 의료보험 체계를 악착같이 고수하고,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켜 왔다.

부시는 이번 한국 방문 때 물 · 전기 · 가스 · 의료 민영화 등을 촉진하며 마찬가지로 결과를 낳을 한미FTA 추진도 빠뜨리지 않을 것이다.

식량난의 주범

부시가 후원하는 거대 곡물 기업들은 세계적 식량 가격 폭등의 주범이다. 그들은 투기와 매점으로 곡물가를 앙등시켰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과 가차없는 시장 개방 압력이야말로 제3세계의 식량 공급 체계를 박살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으로 죽게 만든 주범이다.

지구 환경 파괴의 주범

부시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는 지구적 노력을 번번이 물거품으로 만든 훼방꾼이다. 부시는 자국 대기업의 이윤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자는 교토의정서를 보이콧했다.

전쟁터가 된 세계

부시가 9·11을 빌미로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지위를 잃지 않으려고 끝없는 전쟁에 돌입한 결과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이런 불안정과 혼란은 석유 가격 폭등도 부추겼다. 부시는 또 이스라엘을 사주해 레바논을 침공했고, 팔레스타인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했다.

부시가 수출한 것은 폭력, 살인, 내전, 고문, 공공서비스 붕괴였다. 또, 부시는 민주주의 확산 운운하지만 중동에서 패권을 지키려고 이집트 · 파키스탄의 군사독재와 사우디아라비아 왕가를 지원한다.

최근 부시는 이라크를 아예 공식적 식민지로 만드는 미-이라크 안보협정을 강요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안보협정을 발판으로 이란과 시리아 등으로 전쟁을 확산하려 한다는 것이다.

전쟁과 재앙을 부를 ‘한미 전략동맹’

이명박은 부시 방한에 맞춰 미래 한미 전략동맹의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략동맹의 첫번째 의미는 한국이 미국 주도의 ‘대테러 전쟁’을 지지하고 기꺼이 동참한다는 것이다. 이라크에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자이툰 부대는 이의 상징이다. 이미 이명박은 사실상 재파병 효과를 내는 아프가니스탄 경찰 파견도 약속했다.

그러나 이명박이 캠프데이비드 숙박료로 치려야 할 잔금은 아직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 주도의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와 MD(미사일방어체계)에 한국이 참가하는 것이다.

부시의 기대에 부응해 이명박은 PSI와 MD 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PSI는 장차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일뿐더러, 여기 참가함으로써 한국군이 이란을 봉쇄하고 공격하는 활동에 동원될 수도 있다.

MD 참가는 더욱 커다란 재앙 속으로 국민들을 몰아넣는 행위다. MD가 사실 중국을 겨냥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중국을 겨냥한 주한미군 재편(전략적 유연성)은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이런 한미 군사동맹 강화에 대해 여러 차례 불편한 심정을 표했다. “한미 군사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유물”이라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친강이 대놓고 경고한 바도 있다.

결국, 부시와 이명박이 추진하는 동맹 강화는 동아시아에서 불안정을 심화시킬 것이다.

한편, 좌파 민족주의 진영 일부에서는 ‘북미 관계가 유화 국면인데 굳이 나서서 부시를 반대해야 할까’ 하는 의문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북미 관계는 북핵 협상 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냉각될 수 있다. 그리고 북핵 협상은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본 게 임인 북한 핵무기 폐기 협상에 도달하는 것은 고사하고 당장 플루토늄 보유량 문제로 북한과 미국이 실랑이를 벌일 수 있다.

사실 미국이 북한에 유화 제스처를 취하

블레어를 대체한 “부시의 [새] 푸들”

는 것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발목을 잡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시는 이란 공격 가능성을 재 보는 등 중동 지역에서 패권을 강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부시가 중동에서 어느 정도 숨을 돌리고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패권을 본격적으로 견제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미국은 언제든지 다시 북한 ‘위협’을 빌미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 전쟁을 추진하는 부시 방한에 적극 반대해야 한다. 이것은 이명박 반대 운동이 승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명박에 맞선 촛불이 미친 소 수출 후원자 부시에게까지 확산된다면 이명박의 처지는 훨씬 궁색해질 것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인간이
한국에 온다

